

DISINFORMATION

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 디지털 영역의 대중 담론

점진적 허위정보 규제를 통한 표현의 자유 보호

토비아스 슈미트(Tobias Schmid)

**허위정보**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접해본 사람은 없다는 잘못된 정보. 2021년 안전한 인터넷의 날(Safer Internet Day)<sup>1</sup>을 맞아 실시한 포르사(Forsa)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 중 14~24세의 83%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뉴스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에 담긴 함의는 무엇인가? 사회 불안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민주주의 국가의 허위정보에 대한 한계 허용치는 어디인가? 민주주의와 필수 불가결한 여론 형성 과정을 보호하려면 어느 시점에 규제가 개입해야 하는가?

## 배경

이러한 물음은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에 대해 헤아리다 보면 생기는 문제의식 중 일부에 불과하다.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국경을 넘어 정보가 전파되고 이런 정보가 익명 등 여러 방식으로 수백만 번 공유되는 양상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진다.

그러나 가장 먼저 고려할 부분은 여론 형성 기능과 과정을 잘 만들고 보호하려는 노력의 중심에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지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의 주요 역할에 관심이 쏠리기 전부터 ‘허위정보’로 통칭하는 여러 현상과 잠재적 대응 방안에 대해 끊임없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정확히 논의가 더욱 활발해진 때는 여론 형성의 기능과 공정하고 평등한 과정 면에서 민주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하는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지난 수년간, 선거에 필요한 논의와 논쟁의 과정이 점차 디지털 영역, 더 나아가 기술 기반의 공간으로 옮겨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과 정보를 유포하고 조작하는 기술적 수단이 자연스럽게 생겨났고, 결국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 플랫폼의 역할

온라인 플랫폼의 콘텐츠에 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문제는 그다지 간단하지 않다. 우선, 불법 또는 가짜 정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정보를 조작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콘텐츠 제작자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플랫폼 운영자도 많은 대중을 상대로 인프라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책임 소재 공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들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일 때가 많다.

여론을 형성하는 기제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가장 수혜를 입은 주체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자이다. 따라서 이들은 책임 소재를 논의한 결과에 지대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여론 형성에 관한 이들의 책임 소재 문제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유럽연합(EU)과 국가 차원에서는 많은 규제라도 도입되었다. 여러 플랫폼 운영자는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혐오표현과 다양한 형태의 허위정보를 방지하는 기본 전략을 기업 규정에 포함했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에서는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행을 강제하는 기본적인 규제 구조의 부재 때문에 조작 위험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새롭게 생겨난 책임을 이행하려면 플랫폼 규칙과 법적 규제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 유럽 관점의 허위정보 문제

이미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여러 규제 논의와 마찬가지로 허위정보와의 싸움도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EU는 문화와 미디어와 관련된 사안에서 각 회원국의 주권을 고려해야 하므로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려는 플랫폼 운영자의 노력은 변함없을 것이다.

지난 2018년,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실천계획(Action Plan against Disinformation)을 마련하여 허위정보가 확산하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절차를 수립하였다.<sup>2</sup> 이에 앞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허위정보에 관한 실행기준(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에 따라 허위정보와의 싸움에 필요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sup>3</sup> 무엇보다도 이 실행기준은 정치광고의 투명성, 가짜 계정 삭제,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콘텐츠에 대한 수익 창출 제한 등에 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모질라와 일부 광고 업계에서 처음 이 실행기준에 서명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틱톡은 2019년과 2020년에 소송에 휘말렸다. 실행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업의 자율규제는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으로, 플랫폼 기업이 변화하는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일정 수준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지 표명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첫 단계에 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기업의 자발적 약속에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 플랫폼 운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항상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다. 규칙이란 모호하게 만들어지기 마련이고 필연적으로 기업의 관점을 반영하므로 플랫폼마다 이행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둘째, 이 실행기준에는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물론 자발적 약속을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건전하고 유의미한 이행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세트가 필요하다. 유럽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 그룹(ERGA)<sup>4</sup>이 2020년에 실시한 실행기준 이행 평가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듯이 현재는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sup>5</sup> 현재 플랫폼 기업의 자체 평가 보고서(SAR)에 있는 정보는 거르고 정리한 단계를 거쳐 제공되기 때문에 이행 상태에 대한 타당한 결론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현재 검증 이외에는 증명 책임을 전가하거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현재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추가 조취를 하고 있다.<sup>6</sup> 플랫폼 기업이 실행기준을 개정·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지침<sup>7</sup>과 정치후원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sup>8</sup>이 이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의 불법 콘텐츠에 대한 규칙 시행을 다루는 법안으로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sup>9</sup>도 광고의 투명성과 관련된 실행기준의 특정 핵심 요소를 안에 담고 있다. 앞으로 플랫폼 기업은 위험 평가를 수행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서 서비스 운영이나 사용 또는 인프라의 의도적인 기술 조작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체계적 위험에 대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각각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하지만, 충분하다고 하기에 미흡해 보인다.

## 국가 관점의 허위정보 문제 -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정보

허위정보와의 싸움의 첫걸음 또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2020년 11월 발효된 독일의 새로운 미디어주간협약(Interstate Media Treaty)<sup>10</sup>은 저널리즘 원칙 준수와 관련된 새로운 감독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언론평의회(German Press Council)와 향후 자발적인 자율규제 기관은 물론 주(州) 미디어청도 저널리즘 원칙의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

첫 번째 서면권고가 발송된 후 이미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형식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 방법을 통해 성실한 저널리즘에 대한 인식을 높였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접촉이 이루어진 일부 텔레미디어 제공자는 이미 자사 오퍼링을 변경하였다. 그렇지 않은 경우 관리 감독 절차를 도입한 곳도 있다.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앞으로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광범위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주(州) 미디어청은 이러한 자질을 여러 번 입증한 바 있다.

미디어청은 저널리즘의 실사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여론 형성의 핵심에 있는 문제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저널리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이용하고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자사 오퍼링을 설계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로 인해 수반되는 책임을 수용하고 그에 걸맞은 태도로 비즈니스를 행해야 한다. 출처를 정확히 제시하고, 인용을 올바르게 처리하며, 세심한 연구를 수행하면 정보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준수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이 가져오는 직접적인 영향도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정보 문제에서 균형추 역할을 한다. 제대로 된 정보야말로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미디어주간협약에 반영된 발견 용이성이라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sup>11</sup> 2021년 9월 현재, 독일에서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모든 미디어 오퍼링은 발견이 용이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뉴스 보도, 광역적·국지적 지역 정보, 전문 저널리스트가 참여한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등이 이 기준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이러한 유형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으면 고의성이 있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회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개선하고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도구

그러나 지금까지의 방법 말고도 허위정보의 위협을 완화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 및 여론 형성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앞서 설명한 디지털 영역으로의 확장 또는 전환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본 논의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논의라는 것이 늘 그렇듯 현실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허위정보 대응에서 현재 추구하는 형식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메커니즘을 아우르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의사표현을 콘텐츠와는 별도로 취급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 또한 모든 게시물이 가능한 오랫동안 대중 담론에 머무르는 것도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이 여론 형성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지 방해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결과 불쾌감을 주는 많은 것들이 용인될 수 있고 또 용인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에 대한 보호 조치는 항상 미디어 리터러시와 법적 프레임워크를 촉진하는 사업 간에 상호 작용을 전제로 한다.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투명성 규칙이 이러한 지원 중의 하나이다. 이 규칙을 수립하여 여론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투명성은 콘텐츠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도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이다. 또한, 암암리에 팔로워나 좋아요 수를 돈 주고 구매하는 등의 특정 행위에 관한 관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게시물의 경우, 출현 빈도가 높지만 인위적으로 게시물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표시가 분명히 나타나면 내용의 조작 가능성은 훨씬 낮아진다.



## 특정 형태의 표현을 제한하는 개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투명성은 논의 과정의 토대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논의의 모든 당사자가 같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게시물을 올바르게 분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여론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 유명 인사에게 적용해볼 수 있다. 일단 사실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의사표현을 분류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므로, 모든 이들이 이러한 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투명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경우 사회적 지위를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없으므로, 앞으로 익명 또는 가명을 이용한 온라인 소통에 중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허위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실사 의무가 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실사 의무는 저널리즘 원칙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미 방송 및 저널리즘의 성격으로 설계된 텔레미디어에 적용되고 있으며, 독일 언론평의회와 같은 주(州) 미디어청과 자율규제 기구가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실사 의무의 간접 대상은 정보의 소싱, 집계 및 표시의 결과이며, 고려 대상은 뉴스 및 여론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기술이다. 따라서 투명성 규칙과 유사하게 콘텐츠 자체에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실사는 적용의 범위와 여론 형성 과정에서 다루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유연하고 비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특정 형태의 표현을 제한하는 개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금지 조치는 상기 언급한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 때에만 검토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의 기술 인프라 수단을 오용할 경우, 여론과는 무관한 게시물이 특필되면서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결과가 초래될 뿐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규제 모니터링도 상기 언급한 허위정보에 관한 실행기준의 평가와 관련한 ERGA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 정보 접근성 부족 문제는 실행기준을 더욱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주며, 입증의 부담을 전가하여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규제 당국은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가 식별되면 플랫폼 운영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플랫폼 운영자는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운영자와 규제 당국은 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플랫폼 기업으로서는 규제 당국이 전체 평가를 수행하는데 어떠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규제 당국으로서는 기업 구조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히 어떤 데이터가 규제 업무에 필요한지 정의하기 어렵다. ERGA<sup>12</sup>는 이러한 도구 외에도 실행기준의 시행에 대한 정례적 검토를 도입하고, 또한 미디어 규제당국 또는 ERGA가 주도로 공개 견책을 공식적으로 내려 기업의 부족한 부분을 적절히 지적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 점진적 규제 방식

종합하자면, 앞서 다룬 규제 수단을 도입하고 허위정보가 있는 게시물의 제목으로 다양한 현상을 분류하여 콘텐츠에 대한 중립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적절하고 비례적이며 점진적인 대응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취하면 주관이 크게 개입된 발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평가해야 하는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다. 어떠한 발언이든 처벌 가능한 위반이 되는 선을 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에 의해 보호되며, 이 점에 기반하여 객관적 규정에서 주관적인 기준을 배제해야 한다. 점진적 규제 방식에는 콘텐츠 제작자 및 통신 플랫폼 기업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들어있다. 이 방식은 커뮤니케이션과 여론 형성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두 주체 간의 적절한 책임 분배를 촉진하며, 더는 특별히 새로운 것 없는 현재의 환경에서 사회적 담론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 본 기고문의 원문은 Konrad-Adenauer-Stiftung Auslandsinformationen 'Medien und Meinungsfreiheit' 2021/3호에 실린 독어 원문이다.

\*관련 링크: <https://www.kas.de/de/web/auslandsinformationen/artikel/detail/-/content/meinungsfreiheit-staerken-desinformation-abgestuft-regulieren>

### 토비아스 슈미트(Tobias Schmid) 박사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미디어청(Media Authority of North Rhine-Westphalia)의 청장이다. 또한 주(州) 미디어청장단 회의(DLM)의 유럽 담당 집행위원과 유럽의 국영 미디어 규제 당국 협회인 유럽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그룹(ERGA)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 허위정보

## - 범주, 행위자 및 대응 전략

### 다프네 월터(Daphne Wolter)

허위정보는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며 공론을 조작하거나 개인 또는 기관의 평판을 손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권위주의 국가의 행위자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저해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증가시키기 위해 표적 활동을 이용한다. 권위주의 정권은 시민의 데이터를 통제하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혁명의 수혜를 입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아날로그 세계에서 적용되는 인권, 저작권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률을 디지털 영역에서도 지속해서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 경쟁은 주요 선거가 치러지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정보를 이용한 표적 활동을 전개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독일과 다른 EU 회원국은 그러한 영향으로부터 개방된 민주주의 국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입법 이니셔티브와 태스크포스<sup>13</sup> 외에도 교육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회복력을 키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플랫폼에서 메시징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허위정보를 식별하여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허위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수단으로 규제를 사용하는 것은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 행위이다. 독일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초안을 작성한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법(law against disinformation)’의 경우,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그 목적을 ‘재조정’하여 진실보다는 자신들의 논리를 더 세움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며 결국 가짜뉴스로 여론을 조작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앞으로 투명하고 명확하게 법안을 작성하여 권위주의 정권이 임의로 해석해 다수 의견과 언론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내부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권력이동이 발생할 때도 적용된다.

### 허위조작정보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가짜뉴스**는 개인, 기관, 조직 등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 또는 오정보를 가리킨다. 소문과 잘못된 보도는 가짜 ‘증거’에 기반을 두고 주장을 펼치며 하나의 게시물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그러면 다른 사용자가 올린 유사한 게시물이 이른바 ‘증거의 사슬’로 유입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가짜 음모가 탄생한다.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바꾸기 위해 문맥에서 이미지를 제거하는 때도 많다.

**딥페이크**는 시청각 미디어의 설득력을 이용하여 조작 효과를 내는 가짜뉴스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 움직이는 이미지나 사진을 전자적으로 수정하여 사람과 사건을 변경 또는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가리킨다.

**소셜 봇**은 소셜미디어에서 기계로 제어되고 프로그래밍이 된 프로파일이다. 소셜 봇은 평범한 인간 사용자인 척 접속하기 때문에 얼굴 사진을 올리고 지어낸 이름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소셜 봇은 가짜뉴스를 확산시켜 소셜 네트워크상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롤**은 인간 사용자이다. 이들은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일어나는 토론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휘방을 놓는 세력이다. 이 세력은 다른 사용자를 트롤이라고 부르며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자극하고 비방한다.

## 가해자는 누구이며 그 동기는 무엇인가?

허위정보는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며,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가 직접 개입하여 이를 조직한다. 안정적인 민주주의 환경이 부재한 국가에서는 콘텐츠도 유포되어 국가가 통제하는 미디어에 의해 증폭될 수 있다.

또 다른 동기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오락적 즐거움과 **관심 추구**이다. 타인을 괴롭히고 자극하려고 일부러 도발하는 행위는 사실 오랫동안 온라인 문화의 어두운 단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대부분은 실질적인 정치적 목표도 가지고 있다. 보통 밈이나 디페이크를 이용한 것들은 **오락적 즐거움**을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광고**는 허위정보 활동을 하게 하는 경제적 동기가 될 수도 있다. 이 활동의 목적은 트래픽을 최대한으로 유발하는 것이며, 광고에 대한 클릭률 높이기 위해 콘텐츠를 조작한다.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주제를 클릭 미끼로 삼는 경우가 많다.

## 허위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허위정보 활동은 여러 그룹의 가해자에 의해 운영되며 다양한 동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온상은 언제나 같다.

- 뉴스 출처로서 갖는 소셜미디어의 중요성 증대
- 정치 지형의 양극화
- 기존 미디어에 대한 신뢰 부족

감정을 자극하는 주제는 입소문을 타고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가능한 한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가짜 출처가 인용되고 때로는 미디어 로고가 잘못 사용될 수 있다.

## 시민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디지털 허위정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위협이다. 또한, 기술 진보에 발맞춰 진화를 거듭할 것이다.

**뉴스, 연구 및 정보 리터러시**의 대상 범위를 모든 연령대로 확대해야 한다. 국가 기관, 당국, 그리고 무엇보다도 뉴스를 전하는 저널리스트들이 체계적인 설명을 통해 허위정보의 문제를 부각하고 이를 방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개인적 책임** - 개개인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가짜뉴스 확산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다. 뉴스거리의 출처를 알 수 없거나 추적할 수 없다면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다. 언어의 부정확성도 허위정보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다.

희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현재 인터넷 사용자 사이에서 양질의 저널리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신문사와 방송사로서는 웹상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좋은 기회이다. 이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발견 가능성과 관련된 법적 가능성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 독일어 원본에서 번역됨 -



- 1 *Klicksafe 2021: forsa survey on Safer Internet Day 2021*, in: <https://bit.ly/3BXGR8X> [30 Jul 2021]
- 2 *European Commission 2019: Action Plan against Disinformation: Progress Report, Jun 2019*, in: <https://bit.ly/3il16Wx> [3 Aug 2021].
- 3 *European Commission 2021: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13 Jul 2021*, in: <https://bit.ly/3BVhjte> [30 Jul 2021].
- 4 *European Regulators Group for Audiovisual Media Services (ERGA): <https://erga-online.eu>* [3 Aug 2021].
- 5 *ERGA 2019: ERGA Report on Disinformation: Assess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de of Practice*, in: <https://bit.ly/3iejJLI> [30 Jul 2021].
- 6 *European Commission 2020: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European Democracy Action Plan, 3 Dec 2020*, in <https://bit.ly/3z00Ogl> [30 Jul 2021].
- 7 *European Commission 2021*, n. 3.
- 8 *European Commission 2020*, n. 6.
- 9 *European Commission: The Digital Service Act: ensuring a safe and accountable online environment, 15 Dec 2020*, in: <https://bit.ly/378T2lj> [30 Jul 2021].
- 10 *Die Medienanstalten 2020: Interstate Media Treaty (MStV), 7 Nov 2020*, in: <https://bit.ly/3j2nmEO> [3 Aug 2021].
- 11 *Ibid.*, paragraph 84 MStV.
- 12 *ERGA 2021: ERGA position on the next instalment of the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May 2021*, in: <https://bit.ly/3zP6Eyq> [30 Jul 2021].
- 13 *EUvsDISINFO: <https://euvsdisinfo.eu>* [3 Aug 2021].